
그린 뉴딜 논의 동향 및 추진방향

2020.7.14

이창훈(KEI)

미래예측연구회 포럼



목 차

1. 그린 뉴딜 논의 동향
2. 그린 뉴딜 개념 및 쟁점
3. 그린 뉴딜 비전 및 추진전략



목 차

1. **그린 뉴딜 논의 동향**
2. 그린 뉴딜 개념 및 쟁점
3. 그린 뉴딜 비전 및 추진전략



뉴딜 개념 및 의의

■ 사회, 경제 위기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한 국민과의 새로운 합의**
(New Deal)



1929년 ● 주식시장 폭락과 함께 세계 대공황
1932년 ● 미국인 4명 당 1명 꼴로 실업자 발생

→ 과잉생산 (생산 > 소비)에 따른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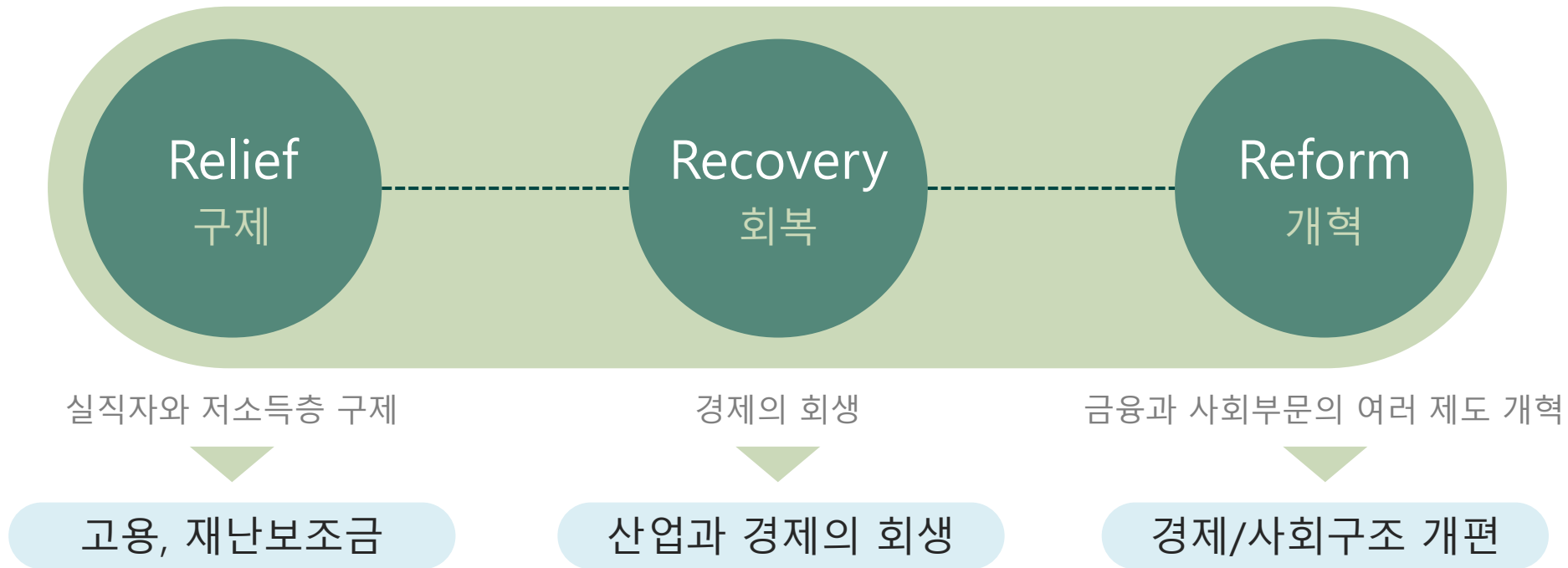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과감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미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합의(New Deal)를 내세우며 대통령 당선

1차 뉴딜 경제 단기 회복 (긴급안정책, 일자리 안정책)

2차 뉴딜 사회보장 안전망 확충

뉴딜 개념 및 의의

- 단순한 경제회복을 넘어 경제위기를 초래한 **시스템을 개혁**하여, 위기의 사전예방
- Metaphor : a **completely new, large-scale** approach (Wikip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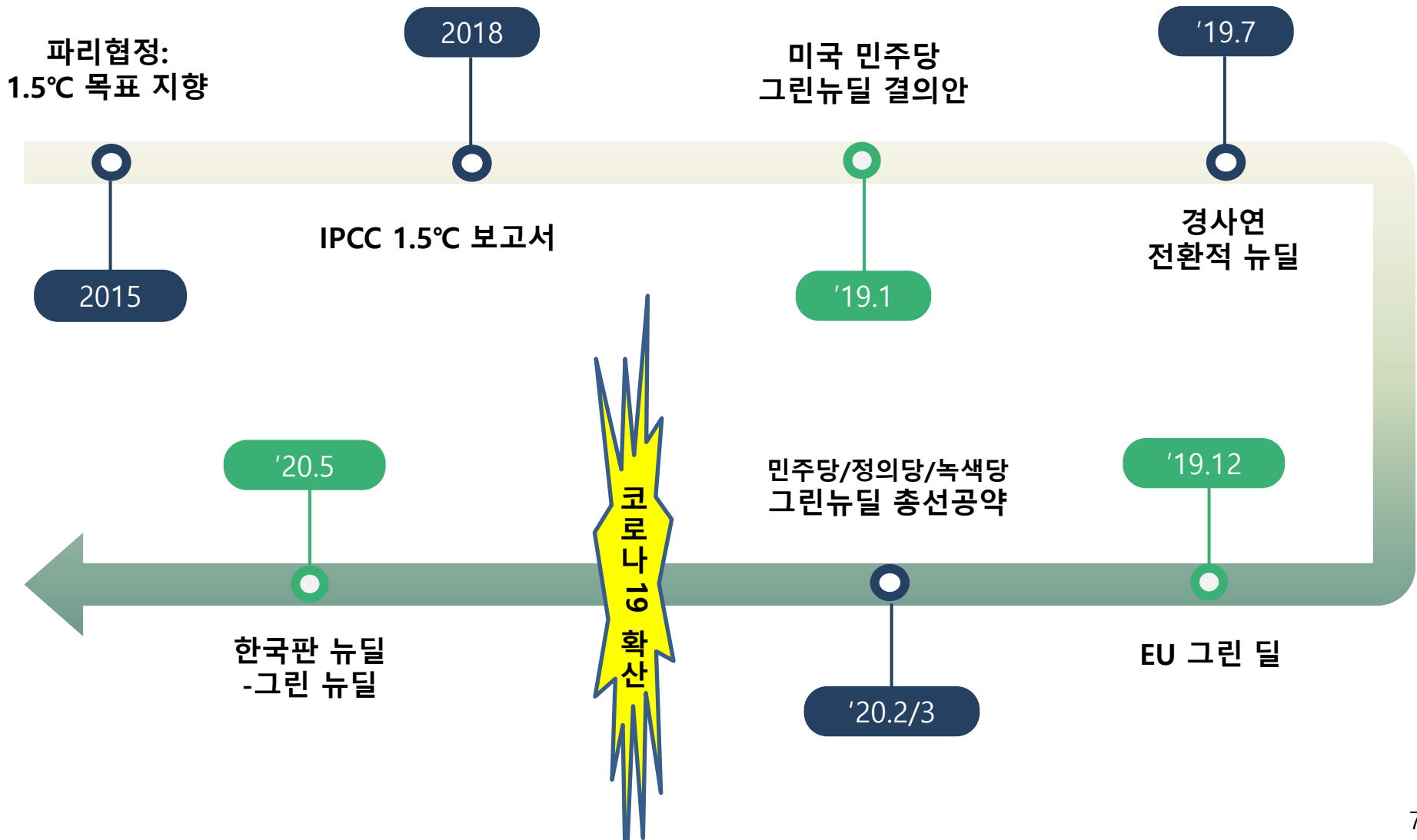


참고: 윤제용, "한국판 뉴딜의 발전방향: 그린 뉴딜"

그린 뉴딜 논의 추이

- 2019.1 : 미국 하원 "그린뉴딜 결의안" 제출
- 2019.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환적 뉴딜"(휴먼, 디지털, 그린 뉴딜)
- 2019.12 : EU "유럽 그린딜"전략
- 2020.2/3 : 정의당, 녹색당, 민주당 "그린뉴딜" 공약
- 2020.5 : 정부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뉴딜)

그린 뉴딜 논의 추이



그린 뉴딜에 대한 인식 차이

■ 코로나 19 이전에 그린 뉴딜을 알았던 사람 : 소수 환경 전문가, 정치인

- 그린 뉴딜 개념: EU 그린딜, 미국 민주당 그린뉴딜
- 그린 뉴딜 = 구조 전환 = 탄소중립목표 + 제도개혁 + 대규모 재정투자
- 결과물 : 민주당 그린 뉴딜 총선공약(20.3)

■ 코로나 19 이전에 그린 뉴딜을 몰랐던 사람 : 대다수 정치인, 공무원, 일반 시민

- 뉴딜 : 경제회복(Economic Recovery)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
- 그린 뉴딜 = 그린 리커버리 = 환경/에너지분야 재정투자
- 결과물 : 정부의 한국판 그린 뉴딜(20.5)

미국 민주당 그린 뉴딜

■ 기후위기 대응 전략 :

- 우선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전략이며, 기후위기와 상호영향을 미치는 경제, 사회위기도 같이 고려

■ 2차 대전 및 뉴딜 이후 최대규모의 국가,사회,산업,경제적 **자원동원**

■ 그린딜 5대 목표(Goals)

- 온실가스 배출 순제로
- 수백만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
- 인프라와 산업에 투자
- 깨끗한 물과 공기, 기후/공동체 회복력, 건강한 식량, 자연접근성, 지속가능한 환경
- 정의와 형평성 보장

미국 민주당 그린 뉴딜

■ 향후 10년간 자원동원 전략

10-year National Mobilization : goals or projects

기후재난에 대한 회복력 구축	수송시스템 개혁
인프라의 개선 및 업그레이드	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적 건강, 경제적 위험 완화 및 관리
전력의 100%를 탈탄소화	생태계를 활용한 대기 중 온실가스 제거 및 오염 저감
분산형 스마트그리드	멸종위기 종, 취약 생태계 보호 및 복원
건축물 에너지효율 업그레이드	유해폐기물 등으로 오염지역 정화
청정제조업의 가속화	다른 오염원 확인 및 제거
지속가능한 농업	국제협력

미국 민주당 그린 뉴딜

■ 그린딜 자원동원 방법

대중에게 소유권, 투자수익, 기술적 지원 보장	가족유지임금, 걱정휴가, 퇴직연금 보장일자리 창출
오염의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모두 고려	노동자의 권리 보장
교육과 훈련	강한 환경과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는 무역기준, 국경조정 등을 시행
과학기술 투자	원주민 보호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과정	독과점 금지 및 폐해 예방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품질 의료보장, 적절한 주거, 경제적 안전, 지속가능한 환경보장

EU 그린 딜

-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19.12):
EU의 제1 국정 아젠다로, 기후변화 및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이자 성장전략

*"The European Green Deal is our new growth strategy.
It will help us cut emissions while creating jobs."*

Ursula von der Leyen,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The European Green Deal is about **improving the well-being of people**. Making Europe climate-neutral and protecting our natural habitat will be good for people, planet and economy. No one will be left behind.

The EU will:



Become
climate-neutral
by 2050



Protect human life,
animals and plants,
by cutting pollution



Help companies
become world leaders
in clean products and
technologies



Help ensure a
just and inclusive
transition

EU 그린 딜

■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순제로**를 달성하면서, **자원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경제**와 **공정하고 번영하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성장전략**

심층 전환적 성격의
정책 설계

- ①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2050) 상향 : 2050 Net-zero
- ② 깨끗하고 경제적이며 안정적 **에너지** 공급
- ③ **청정·순환 경제**를 위한 **산업** 전략
- ④ **건축물**의 에너지·자원 효율화
- ⑤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수송**으로 전환 가속화
- ⑥ 공정하고 건강하며 환경친화적인 **식품체계** 설계
- ⑦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복원
- ⑧ **유해물질** 없는 환경을 향한 오염배출 제로화

모든 EU 정책영역에서
지속가능성
주류화

- ① 녹색재원조달, 녹색투자, & 공정한 전환 담보
- ② 국가 예산의 녹색화, **적정한 가격신호** 표출
- ③ 연구 강화 및 혁신의 확산
- ④ 교육과 훈련의 활성화
- ⑤ 녹색선언 : “아무것도 해하지 말라”

EU 그린 딜

■ 그린딜 정책 로드맵 : 개별 목표별 구체적 정책이행 일정 제시

기후 대응	일정
2050 기후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유럽 “기후법” 발의	2020.3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50~55%('90년 대비)로 상향 종합계획	2020 여름
강화된 감축목표에 따른 제반 법령 개정 : ETS제도,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자동차 이산화탄소배출, LULUCF 등	2021.6
에너지세제 규정 개정안	2021.6
일부 분야 탄소국경세 메커니즘 도입안	2021
새로운 EU 기후변화 적응 전략안	2020/2021

EU 그린 딜

깨끗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에너지	일정
회원국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 최종안의 평가	2020.6
에너지 분야들의 스마트 통합 전략	2020
건축물 분야 'Renovation Wave' 이니셔티브	2020
'범유럽 네트워크-에너지 규정' 점검·평가	2020
해상풍력전략	2020
EU 공동농업정책의 녹색화/'농장에서 포크까지'전략	일정
회원국 전략계획 초안 검토	2020~21
'농장에서 포크까지 전략'	2020 봄
화학살충제, 비료, 항생제 사용 저감 대책	2021

EU 그린 딜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교통	일정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교통 전략	2020
공공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한 자금지원 요청	2020~
지속가능한 대체 연료의 공급, 생산을 독려하기 입법대안 평가	2020~
「복합운송 지침」 수정안	2021
「대체 연료 인프라 지침」과 「범유럽 네트워크-교통 규정」 검토	2021
철도와 내륙수로 확대 및 관리개선 이니셔티브	2021~
내연기관차 대기오염배출기준 강화안	2021

EU 그린 딜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보호	일정
2030 EU 생물다양성 전략	2020.3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대책	2021~
신 EU 삼림전략	2020
삼림훼손이 없는 가치사슬 지원대책	2020~
유해물질 없는 환경을 위한 오염 제로 비전	일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전략	2020 여름
대기, 물, 토양의 오염제로 행동계획	2021
대형산업시설의 오염 방지 대책 개정	2021

EU 그린 딜

모든 EU 정책에 지속가능성의 주류화	일정
공정한 전환 메커니즘(안)	2020.1
- 공정전환기금, 지속가능유럽투자계획 포함	2020 가을
지속가능금융전략 개정	
‘비금융공시지침’ 검토	2020
회원국과 EU의 녹색예산제도 검토 이니셔티브	2020~
환경, 에너지보조금 등 관련 국가보조금가이드라인 검토	2021
모든 신규 EU 이니셔티브에서 그린딜 목표와 정합성 추구	2020~
유럽그린딜 효과를 저감하는 일관성 결여 입법 확인, 개선	2020~
European Semester(EU집행위/회원국 회의)에서 SDGs 통합	2020~

EU 그린 딜 – 투자 계획

■ 향후 10년간 1조 유로 이상 투자 (개별회원국 독자예산 제외)

(단위: 10억 유로)

EU 예산: 503

(전체 예산의 25%)

투자보증: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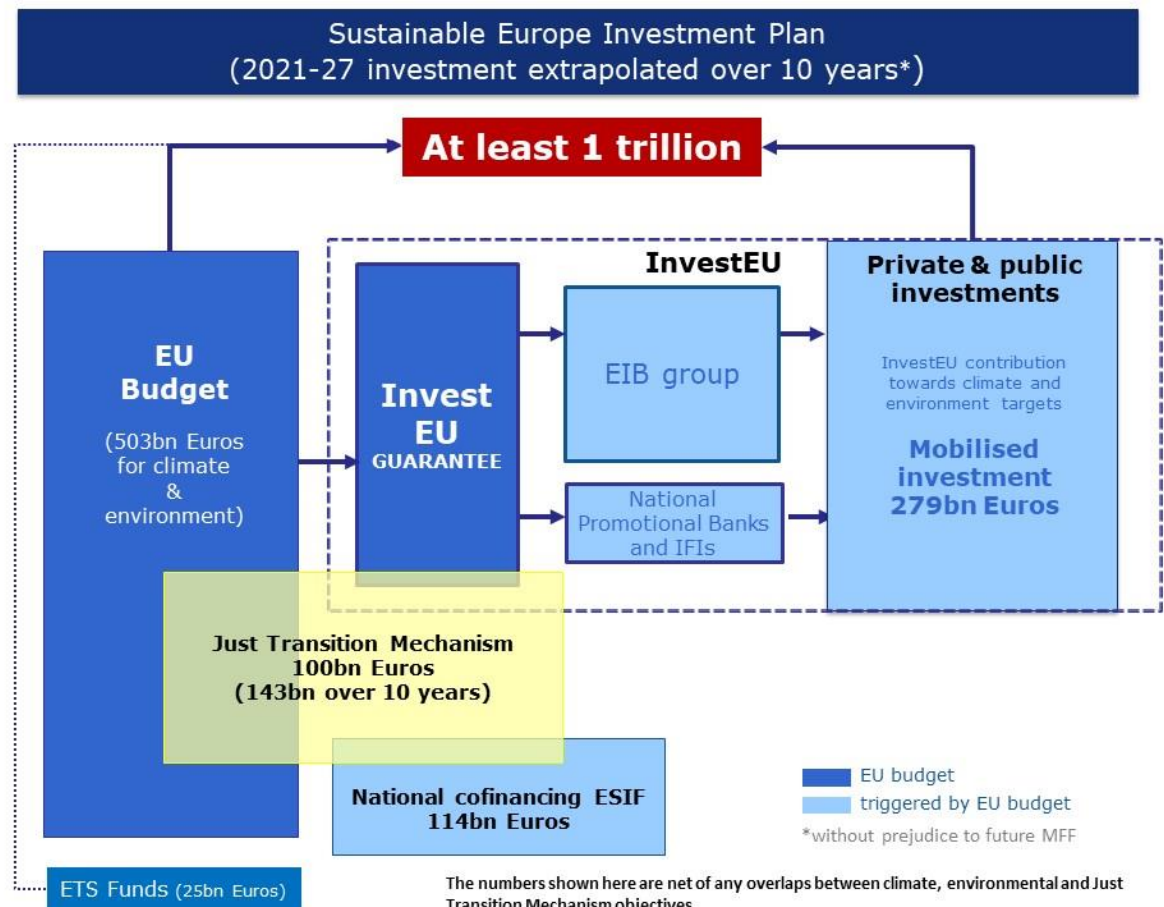
(EIB 투자액의 50%)

회원국 분담금: 114

공정전환메카니즘: 143

ETS 기금: 25

(경매액의 20%)



EU 그린 딜 – 그린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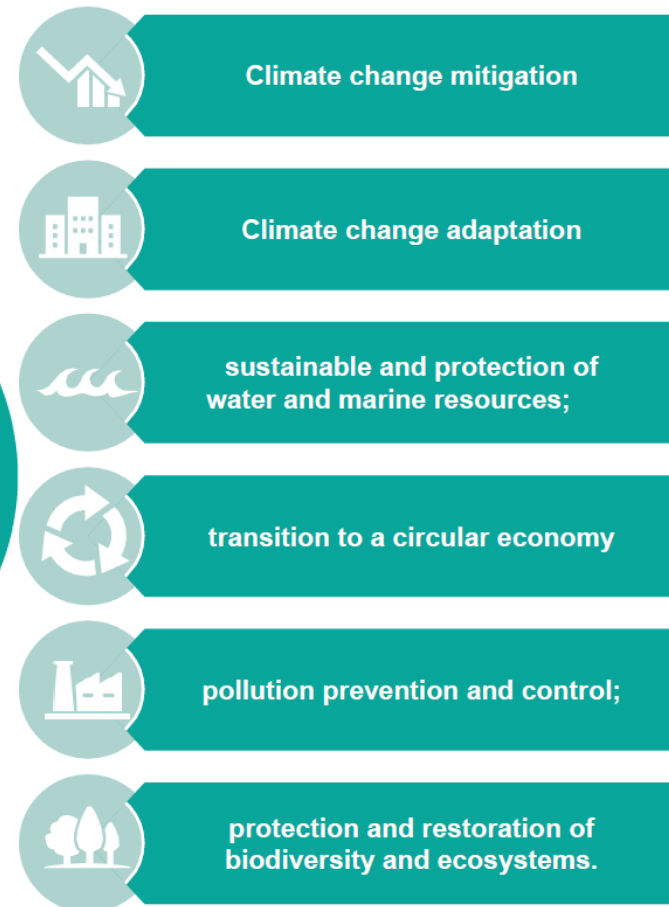
EU Taxonomy

- 경제활동의 환경성과 기준(기술적 평가기준)
- 3가지 원칙



Taxonomy:
Final Report of the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March 2020.

6대 환경목표



민주당 그린뉴딜 공약

■ 2050년 장기 목표설정 : 탄소제로사회 비전

■ 범위: 기후 및 대기문제 초점

■ 주요 아젠다

- **2050년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로드맵 및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 투자 확대, 저탄소에너지 및 산업혁신 추진
-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 및 에너지 효율화 적극 추진
- 탄소세 도입 검토 및 그린뉴딜 투자 세제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석탄금융 중단
- 에너지 분권체계 구축
-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선진국 수준($10\mu\text{g}/\text{m}^3$)으로 감축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20.05.07)

디지털 인프라 구축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구축

- ① 데이터 소주기 인프라강화
- ② 국민체감 핵심6대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

- ① 5G 인프라 조기구축
- ② 5G+융복합 사업 촉진

AI인프라
확충 및
융합확산

- ①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 ② 쏠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산업 육성

- ①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 ②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SOC 디지털화

- ①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 ②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사람 투자를 통한 디지털 선도인력 양성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디지털 뉴딜

- ▶ D.N.A 생태계 강화
- ▶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 ▶ 비대면 산업 육성
- ▶ SOC 디지털화

그린 뉴딜

-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
-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고용안전망 강화

자료: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06.01)

“향후 추가과제를 보완·확대하여 7월 중 종합계획 확정·발표”

문 대통령 “그린뉴딜, 한국판 뉴딜사업 안에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친환경·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을 포함한 관계 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한 합동 서면보고를 받은 뒤 “그린 뉴딜은 국제 사회와 시민 사회의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그린 뉴딜을 주요 사업으로 포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그린 뉴딜의 구체적인 사업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린 뉴딜은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투자와 일자리를 정책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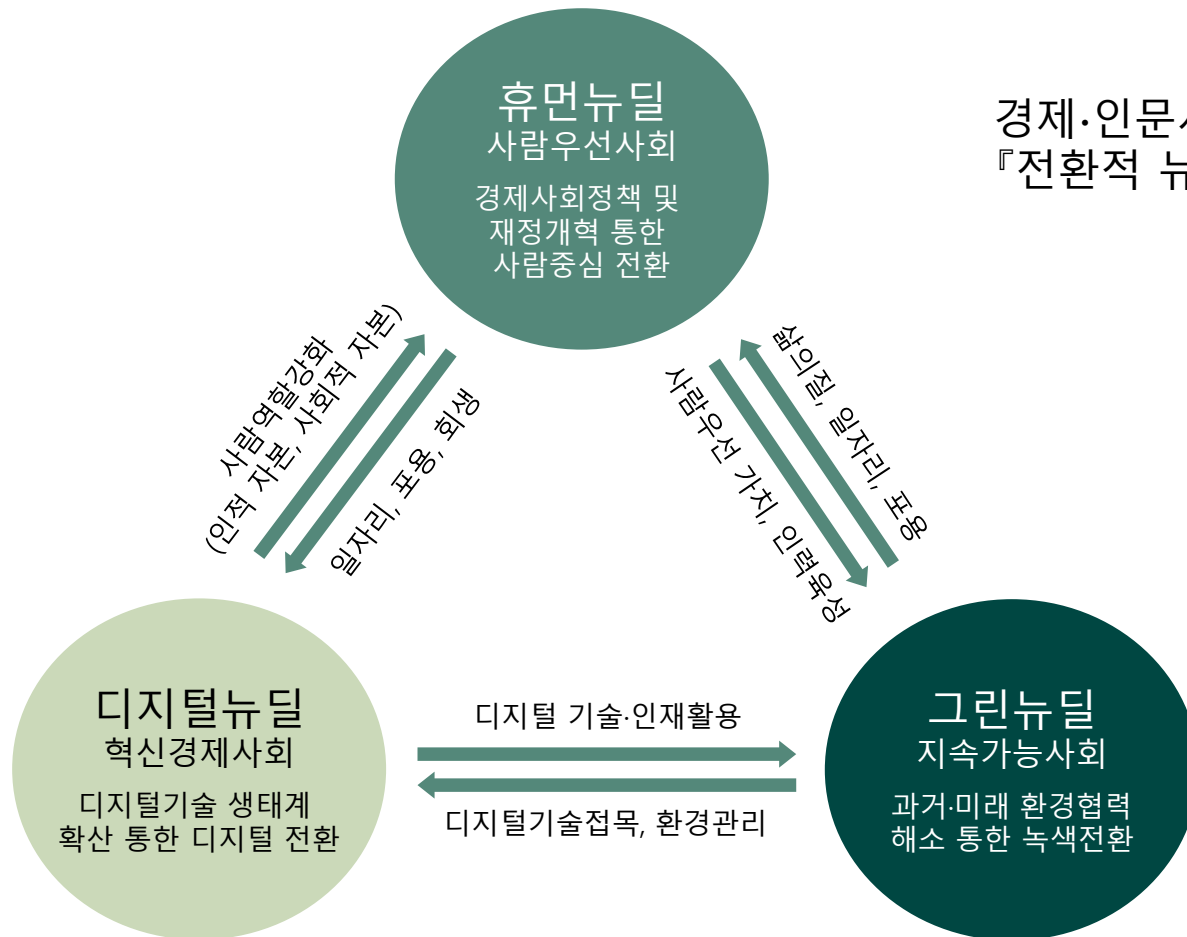


한국판 뉴딜

전 략	과 제	투자/효과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p>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전환</p> <p>스마트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 추진</p> <p>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p>	<p>재정: 5.8조원 일자리: 8.9만개 (’22년까지 합 계)</p>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p>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p> <p>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p>	<p>재정: 1.7조원 일자리: 1.1만개</p>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p>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p> <p>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p> <p>온실가스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선박으로 조기 전환</p>	<p>재정: 5.4조원 일자리: 3.3만개</p>

경사연 전환적 뉴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환적 뉴딜』(2019.7.3)



한국판 그린 뉴딜: Green Recovery

-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그린 뉴딜은 경기부양을 위한 그린 리커버리 성격
- 향후 녹색전환 장기목표 설정과 제도개혁(Green Reform) 포함할 필요

EU
그린딜

민주당
그린뉴딜

기후·환경
위기 대응 국가전략

장기 구조전환 전략

목표설정-제도개혁-투자사업

한국판 그린뉴딜

경제위기 대응 경기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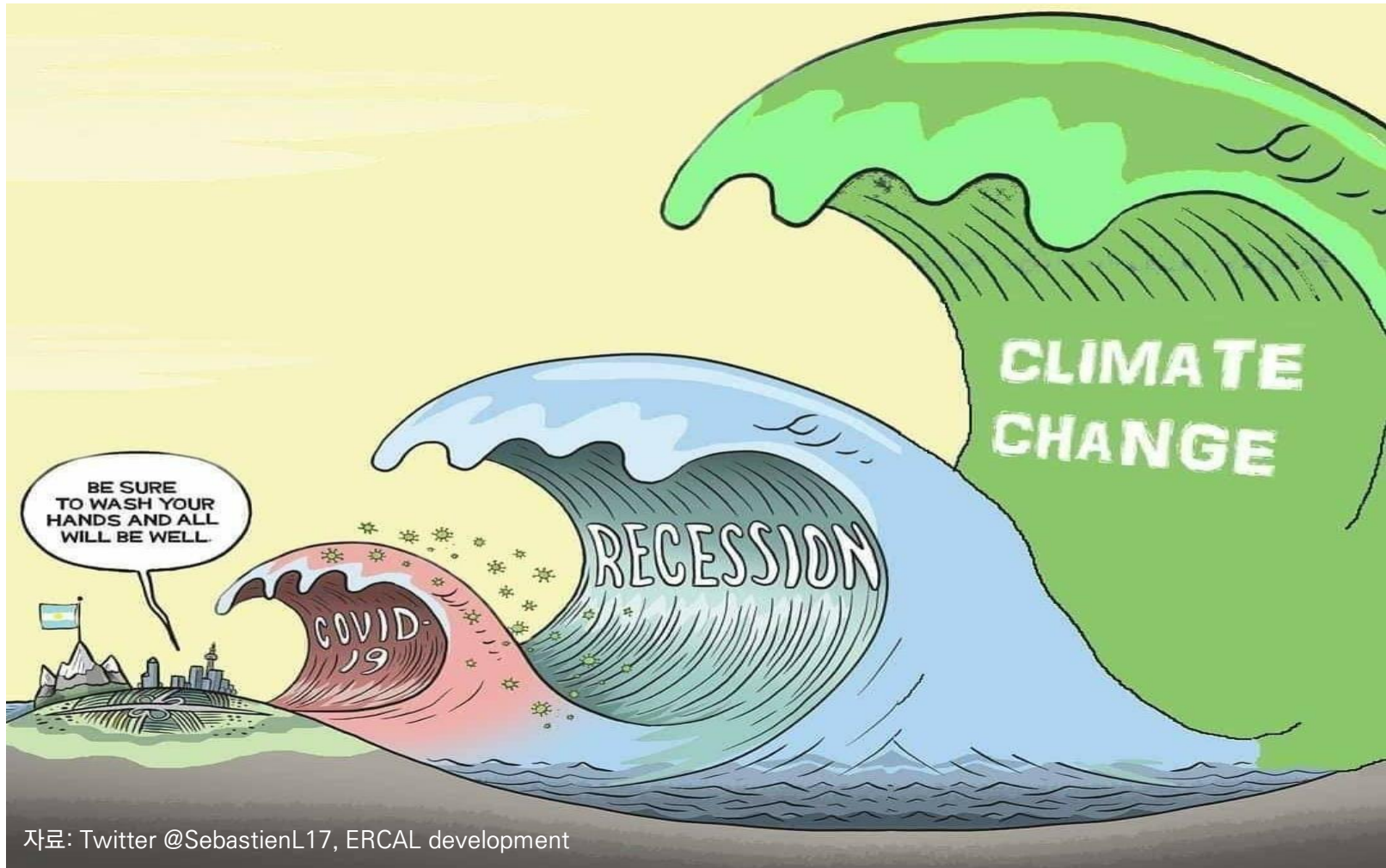
단기 재정투입 사업

예산투자

코로나 19 이후
그린뉴딜의 과제

- ➔ 국가적 논의를 통해 우리사회의 장기 기후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자 및 제도개혁 추진
- ➔ 단기적으로, 환경 및 기후대응 분야 신속집행가능 투자사업 선별 및 집행

한국판 그린 뉴딜: Green Recovery



목 차

1. 그린 뉴딜 논의 동향
- 2. 그린 뉴딜 개념 및 쟁점**
3. 그린 뉴딜 비전 및 추진전략



그린 뉴딜 개념

■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와 환경위기에 대응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책으로서의 그린뉴딜은 단기적 처방으로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에는 한계
- 오히려, 기후위기가 경제위기 (기후적응실패, 무역장벽)로 전이되지 않도록 경제의 체질(녹색전환)을 개선하여 체력(녹색경쟁력)을 키우는 장기 전략 필요

■ 그린 뉴딜의 요소

- (전환) 양 위기를 초래한 경제 및 사회구조의 심층적 변화 목표
- (성장) 탈탄소, 친환경과정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 (수단) 대규모 재정투입과 근본적 개혁 정책
- (포용)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받거나 취약한 계층이나 지역 보호

그린 뉴딜 필요성

■ (기후/환경) 기후위기 및 환경 위기 선제 대응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

-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21세기 말 산업화 이전 대비 **3°C 이상 상승 전망**:
해수면 상승, 폭염, 태풍, 홍수 등 기후재난의 빈도와 심각성 모두 증가
- 인구증가와 산업화는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여 **제6차 생물대멸종**이 진행 중이며,
동식물과 인간의 간섭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도 급속 확산**
- **미세먼지, 플라스틱** 등 화석연료 유래 환경문제가 국민들이 건강 및 안전 위협

■ (경제) 세계는 이미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급속한 녹색전환 중**

- EU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0 (Net-Zero)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린뉴딜을 국정 최우선 아젠다로 추진 중이며, 미국 민주당도 그린뉴딜 전략 수용(미국 캘리포니아 등 7개 주는 재생전력100% 목표)
- 주요국의 녹색투자로 **대규모 시장 창출**되는 반면 **탄소국경세 등 무역장벽 강화** 예상
- 시장에서도 RE100(재생에너지100% 이용) 요구가 높아지고, 연기금 및 금융사는 기후리스크를 반영하여 석탄발전 및 화석연료관련 기업 투자 철회

■ (코로나 19) 경제위기로 부터 **경제회복과 구조전환 수단으로 그린뉴딜 필요**

- 경제회복이 과거 시스템(화석연료 기반)으로 복귀가 되어서는 안됨
- 경제회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를 **새로운 경제구조로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

그린 뉴딜 쟁점: 목표 설정

■ 미국, EU, 민주당 그린뉴딜 :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

■ 순배출 제로 등 명시적 목표 설정 장점

- 명확한 목표제시로 정부재정 및 정책노력의 결집
- 기업 등 민간에게 정책불확실성 제거
- 환경시민단체 기대 부응, 국제사회 주류화

■ 순배출 제로 등 명시적 목표 설정 단점

- 순배출 제로 목표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 및 정치적 논의 부재
- 논의의 정치화로 경제회복 실기 가능성
- 순배출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패키지를 단기에 마련하기 어려움

그린 뉴딜 쟁점 : 정책수단

■ 정책수단의 선정 : 목적(부양 vs. 전환)에 따른 차별성

- 정부재정 only? : 전환관점(장기, 심층변화)에서는 정부재정은 제약적
- 과감한 규제제도 : 단기적 경기부양에 걸림돌
- 루스벨트 뉴딜, EU 그린 딜, 민주당 그린 뉴딜 : 정책 및 제도개혁 포함

■ 제도개혁

- 결국은 '전환'재원을 민간에게 부담시키는 것
- 그레이 투자(석탄발전 등)에 대한 억제 가능

■ 규제제도 예시: 전기차 보급

- 전기차 및 충전소 건설에 정부보조금 지급
- 전기차 등 무배출 자동차 의무화(미국)
- 주요소에 충전소 설치 의무화(독일 검토 중)

■ 경제적 유인수단 예시: 탄소세, 배출권 유상할당

- 결국 탄소저감시설 설치, 또는 재생에너지로 전환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 탄소세수 및 배출권 유상할당분 경매수익은 정부의 재원으로 활용가능

그린 뉴딜 쟁점 : 거버넌스

■ 법률 신규제정, 수정

- 그린뉴딜 기본법, 특별법,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에너지전환기본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 추진기구

- 기후에너지부 vs. 그린뉴딜위원회-그린뉴딜기획단
- 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추진주체

- 지자체의 역할 : 역량 강화
- 시민/주민 참여 : 특히 전환과정 중 피해지역, 노동자, 업계 지원
- 민간기업 : 녹색금융의 녹색 기준 결정

그린 뉴딜 쟁점 : 포괄 범위

■ 기후변화 중심 vs. 기후 및 환경 중심

■ 기후 및 환경 중심

- 미국, EU 그린 뉴딜
- 그린의 상징성 : 환경, 자연
-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분야가 전통적으로 조직적 연계가 강함
- 코로나 19이후 자연(생명 및 공간)에 대한 감수성 증가

■ 기후 중심

- 우리나라 민주당 그린뉴딜 정책
- 목표가 단순, 명확
- 기후적응을 통해 환경과 연계 가능

목 차

1. 그린 뉴딜 논의 동향
2. 그린 뉴딜 개념 및 쟁점
3. **그린 뉴딜 비전 및 추진전략**



그린 뉴딜 비전 체계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녹색전환 선도국가



녹색전환 추진기반 확립

그린 뉴딜 비전

■ 비전 : 그린뉴딜 비전 :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녹색전환 선도국가

- 추격형 국가(경제)에서 선도형 국가(경제)로 전환이라는 기존 국가전략 프레임 활용
- 그린뉴딜은 우리 시대의 그리고 미래의 (확실성과 영향력 측면에서) 가장 심대한 위기인 **기후/환경위기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국가적 노력 (대규모 투자+정책혁신)을 의미
- 그린뉴딜은 우리 경제, 사회구조를 '친환경'으로 '전환'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전략**이기도 함
- 기후, 환경위기는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위기로, **현재 우리 대응수준은 이제 추격을 막 시작한** 정도이나,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과 최고의 녹색경쟁력 확보로, **녹색전환'선도'국가로 발돋움**

그린 뉴딜 목표

■ 목표는 비전의 '녹색전환 선도'의 의미를 **지속가능발전 프레임의 환경, 경제, 사회 3가지 측면에서 구체화**

- **환경적 목표 : 2050년 탄소중립 및 생태용량 증진**
구체적인 시점은 LEDS 수립과 연계하여 결정
인간과 자연의 공생의 기반이 되는 생태용량을 플러스 전환
- **경제적 목표 : 세계 최고수준의 녹색경쟁력 확보**
녹색경쟁력은 경제전반의 녹색화(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녹색산업의 경쟁력(세계시장 점유율), 양자를 포괄
- **사회적 목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포용적 전환**
전환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고 비용과 혜택을 공유하여 우리 사회의 신뢰와 응집력을 제고함을 의미

그린 뉴딜 추진 원칙

■ 추진원칙은 핵심 전략의 선정 및 이행 시 고려사항

- **추가적 정책효과**

집중적 투자, 혁신적 정책 추진을 통해 통상 수준 이상의 환경개선/일자리창출 지향

- **적정 정책믹스**

마중물 역할을 하는 대규모 재정투자와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정책혁신을 연계

- **디지털, 휴먼 뉴딜과 연계**

디지털, 휴먼 뉴딜 등과 융합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플러스 가치 창출

- **소통과 참여**

시민들과 이해관계자의 광범위한 참여와 심층 토론을 통해 목표와 정책수단을 결정

추진전략 1 : (기후)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전환의 가속화

- **국민적 공론화를 통한 탄소중립 목표시점 설정 및 2030년 감축목표 상향 검토**
 - 그린뉴딜이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재인식과 대응 강화를 의미한다면, 감축목표 강화를 통한 대응의지 표현 불가피
- **실효적 탄소가격(Carbon Pricing)을 통한 기업의 효율적 감축 노력 유도**
 - 제3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1-25) 유상할당 비율 최소 20%
 - 발전부문 탄소비용 100% 반영 환경급전 시행 추진
- **재생에너지 확산정책의 전환**
 - 전력부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상향 : 현재 목표(30년 20%, 40년 30~35%)
 - '계획입지제도'의 도입 및 시행을 통해 지역 및 주민갈등을 정부책임 하에 해결
 - 재생에너지 소매시장 자유화 : 녹색요금제, PPA, 시장개방 등
- **에너지가격 정상화를 통한 에너지효율정책의 실효성 제고**
 - 전기요금 결정구조의 개혁 : 도·소매가격 연동제, 독립적 가격규제기구 신설
 -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산업구조 개편 : 모든 분야에 경쟁체제 도입
-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로드맵 마련 및 보완정책 마련**
 - 재생에너지확산과 탄소비용 반영 강화에 따라 시장에 맡겨둘 경우 석탄발전 좌초자산화

추진전략 2 : (인프라) 기후/위기에 강한 사회인프라 구축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전력인프라의 신속한 업그레이드

- 재생에너지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계통접속을 위한 **배전망 신속 증설**
 - *송배전망을 관리하는 한전의 선제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재생에너지 예측 및 **실시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비용정산 등 시장제도도 함께 마련
- 스마트계량기, V2G 기기 보급확대를 통한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로드맵** 마련 및 보완 정책 마련

■ 저탄소 친환경 운송 확산을 위한 교통인프라 그린화

- 잠재적 전기차 수요자의 구매전환을 위한 **충전기 보급 확대**
 - *보조금 지원을 통한 초기 확산과 함께 의무제(예, 주유소 충전기 설치 의무화 등) 도입 검토
- 전기차보급은 **평균연비(온실가스)규제제도** 위주로 개편
 -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경기부양목적으로 제공하고 단계적 폐지
대중교통(버스), 화물차 등 평균연비제도 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지급 지속
- **대중교통 확산 및 광역철도 등 철도망** 조기 구축
- 디지털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및 인프라 혁신

추진전략 2 : (인프라) 기후/위기에 강한 사회인프라 구축

■ 제로에너지 건물 본격화 및 도시 환경성 제고

- 신축 공공건물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및 민간건물 조기 적용
- 노후 공공건물 대상 제로에너지 그린리모델링(단열/태양광/환기) 추진
*경로당, 유치원/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청사, 초중고학교 대상(2013년 기준 약 13만5천동)
-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선제 추진 및 그린리모델링 민간시장 조성
-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 환경목표(물,기후,생태,건강)별 디지털/그린요소결합 및 통합
- 제로에너지건물 + 기후생태교육을 결합한 그린 스쿨
*전학년 생태전환교육 및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집중교육 실시

■ 가뭄, 홍수 등 기후재난 대응 환경기초시설 고도화

- 분리관리 중인 가뭄/홍수 정보의 통합/연계를 통해 신속한 홍수대응 및 전주기 가뭄관리
- 빗물저장, 지하 유출수, 빗물·하수 재처리수 등을 활용한 도심하천 복원 및 자연성회복
- 누수 상수도 단계적 개선 및 ICT 기반 전과정 ICT, AI 기반 스마트화

추진전략 3 : (자연)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그린 인프라 구축

■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도시자연 확충

- 전국 **미집행 도시공원의 생태복원** 및 공원조성 : 국공유지 우선 추진 및 지자체 양여
*’20.07.01. 이후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국 도시공원 중 약 48.2%(미집행면적 446.7km²) 일몰 예정
- 취약계층 밀집지역 및 공원소외지역의 **생태적 휴식공간** 조성, 복원 확대
- 공원·녹지와 오픈스페이스 등을 연결 **다목적 녹도(Green way)** 조성

■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을 통한 생태계 건강성 회복

- **국토생태축**(백두대간, 정맥, DMZ, 5대강, 연안)의 훼손, 단절지역 조사 및 **순차적 복원**
- 국제적 수준의 **보호구역** 지정 강화 및 국토우수생태계지역* 확대
*보호지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 하천구조물(농업용 보, 제방 등)로 단절된 **수생태계 연결성 확보**

■ 자연생산성이 높은 연안지역 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하굿둑 개방·복원**으로 기수역 생태계서비스 가치증대 실현
*해수유입에 따른 농업용수 이용제한 대응방안 마련 후 단계적 추진
- **자연해안선 복원**을 통한 연안공간 재생 및 생태계 건강성 확보

추진전략 4 : (산업) 경제의 녹색전환과 녹색산업의 성장동력화

■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녹색전환

- 원료로 사용되는 에너지의 대체 물질 및 공정 개발 지원: 수소환원공법, 바이오정유 등
-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해 규제, 지원, 국제협력 등 모든 정책역량 결집

■ 자원과 에너지순환에 기반한 경제시스템 구축

- 재사용 기반 에너지전환 시스템 구축 : 배터리, 태양광 패널
- 플라스틱 최소화 및 플라스틱 100% 재활용 시스템 구축
- 식량자원 생산, 소비 및 폐기물 처리의 순환성 강화

■ 기업의 녹색경영 정착 및 주류화

- 상장기업 환경정보 공시의무화, 제품의 환경성 평가 확대로, 시장(투자자, 소비자)을 통한 기업의 녹색경영 유도

■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방위 지원

- 창업, 벤처, 중소기업 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 분야별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생태계 구축 지원

추진전략 5 : (지역)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공정한 전환

- 녹색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 노동자, 기업 대책 마련
 - 이해관계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정전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피해대책 마련
 - **에너지전환지구 지정** 등을 통해, 폐쇄되는 원전 및 석탄발전 지역의 대체산업 추진
- 지자체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의 녹색 전환 지원
 - 탄소중립을 포함한 **지자체 그린뉴딜계획** 수립 및 이행 : 지자체에 권한, 예산, 인력 이양
 - '**그린 뉴딜 포괄보조금 신설**'
 - '**지역에너지공사**'(가칭)를 설립하여 지자체 녹색전환을 지원
- 주민들이 주도하는 **녹색새마을 운동** 추진
 - 농촌태양광, 공동시설 리모델링, 마을숲 복원, 상하수도 개선 등 복합 추진
 - 재생에너지시설 관리, 생태계서비스 관리 등 지역 일자리 창출모형 개발
- 지역주민 참여 확대로 소득증진과 에너지전환 선순환 구조 정착
 - 농협 등 농업전문기관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비즈니스 모델** 마련 및 확산
 - 해상풍력사업의 **지역주민참여 및 이익공유 기준** 마련

그린뉴딜 기반조성 : (기반) 녹색전환 추진 기반 확립

■ 신규 인력 양성 및 전환부문 **교육훈련** 강화

- 녹색전환(그린 리모델링 등) 및 녹색산업 분야 신규 일자리 직업훈련
- 전환피해 지역 및 산업의 주민 및 노동자 재교육

■ 녹색뉴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 정부예산의 지출조정(**녹색예산 비중 상향**) 및 신규재원 마련
- **녹색금융기준**(녹색경제활동 기준) 마련을 통해 민간재원 유입 활성화

■ 그린뉴딜 거버넌스 구축

-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 탄소중립 목표 시점, 주요 정책수단, 주관기구 및 재원
- '**녹색전환위원회**'(가칭) 등 녹색전환관련 국민들의 인식제고 및 공론화를 주도할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정부정책에서 **녹색전환의 주류화**

- 모든 정부정책수립 시 기후 및 환경영향 고려 추진
- 주요 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내실화 및 확대**
- 녹색전환위원회를 통한 주요 정책 지속가능성 심의